

새 DHS 규정이 공적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일부 이민자들의 영주권 취득을 위협하고 있다

8 월 12 일, 트럼프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몇 년을 기다린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장애물을 만드는 규정을 마무리했다. 이 “공적 부담” 규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몇몇 이민 신청을 심사할 때 고려할 공적 혜택 목록의 확대이다. 이 공적 혜택에는 이제 특정 헬스케어, 식료품 보조 및 주택 프로그램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안된 규정은 시민권 신청자, 난민 및 망명자와 같은 인도주의적 이민자 및 DACA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향후 특정 종류의 프로그램 즉, Medicaid, SNAP 식료품 보조 및 공공 주택 (섹션 8) 프로그램의 수령 여부는 이민 공무원이 영주권 심사를 할 때 결정 요인이 된다. 이 규정은 오늘 당장 시행되지 않고 결정되기 전까지 60 일의 유예 기간이 있다. 유예기간 동안 소송이 제기된다면 추가적으로 실행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민자 옹호단체와 전문가들은 DHS (국토 안보부)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현재 공적 혜택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도 즉각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개인이 앞으로 어떤 공적 혜택에 참여를 결정할 때,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리길 권장하고 있다.

PIF 가 이민 및 공적 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미디어를 위한 원격 브리핑을 개최

이민자 가족 보호 (PIF) 캠페인은 이민법 및 공적 프로그램의 전문가들이 기자들에게 이번 개정안이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이민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혹은 없는지를 알려주는 원격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개개인이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 및 법적 지원을 연결해 준다. 다양한 언어로 질문을 하고 전문가들과 1:1 인터뷰를 예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시간이 마련된다. 이 미디어 통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곧 이어지니 지켜보길 바란다.